

'5·18 정신적 손배' 소멸시효 기준 비판 잇따라

법원 "시효 지났다" 정부 주장 수용...윤상원 열사 유족도 항소심 패소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소멸시효 '어불성설'...정치권 보완 입법 절실

5·18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3월 9일자 광주일보 7면)을 받아들여주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로 판단해 패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에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인정"하고 유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윤 열사의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 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윤 열사 어머니에게 1심보다 적은 2억원의 위자료(윤 열사 고유 상속액 포함)만 인정했고, 형제·자매 6명에게는 고유 위자료 채권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윤 열사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은 것은 명백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1990년 12월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도 5·18위자료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

회에서 계류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2021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시점을 유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5·18단체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반인륜 국가폭력 범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치권에서의 빠른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독사 많은 아파트' 편견 깨려 광산구 하남중공아파트 주민들 책 펴내 오늘 하남종합사회복지관서 출판기념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정책 차원에서 도입한 영구 임대아파트의 편견을 깨기 위한 이들이 있다.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적 소외 등의 각종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싶다는 것이다.

3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중공아파트의 주민 3명은 "영구임대 아파트도 어느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정겨운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리들도 이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뭣사는 사람들이란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호소했다.

이곳에 올해로 30년째 살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 김안식(61)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척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를 가지게 됐다.

김씨의 오랜 목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로 갔지만 비인가시설 재활원에서 한방에 여러명이 함께 몸을 웅크려 자야했다. 사우나에서 일할 적엔 카운터가 곧 집이었다.

김씨는 온전히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광주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중공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곳에 자리잡게 됐다.

김씨는 "임대아파트를 얘기할 때 '뭣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거나 '고독사, 자살 등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라고 말한다"며 "비록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가진게 적을 순 있지만 단순한 편견으로만 판단하는게 속상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환경이 되자 이웃들이 돈을 모아 한우를 선물해주고, 지난 여름 열병을 앓자 좋아하는 홍어를 선물받기도 했다"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베풀 줄 모르고, 범죄가 잦을거란 편견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4년 전 이사한 서태중(68)씨도 이곳은 '사람 사는 맛 나는 곳'이라고 웃어보였다. 아파트 내 '어울림 봉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씨는 단지 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중공아파트에서 31일 서태중, 김안식, 박재관(왼쪽부터)씨가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도시락 배달, 아파트 청소, 이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씨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만 나가도 언제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고, 그렇다보니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리 모두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새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독립에 성공한 박재관(58)씨는 "(영구임대주택은) 내겐 너무 소중한 공간이고 달라진 삶을 살게 해준 집이다"면서 "솔직한 이들이 지나가며 '거지아파트'라고 말할 땐 가슴이 미어진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이 빈곤층을 대표하는 주거지라는 낙인을 깨기 위해 '함께해서 아름다운 하남마을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다. 이들의 사연이 담긴 책의 출판기념회는 1일 오후 2시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항일운동·집단희생 등 3건 규명

2기 진실화해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광주와 전남의 항일독립운동 및 집단희생 사건 등 총 3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31일 제65차 회의를 열고 '함평 4·8문장장터 만세운동 참여자',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나주·장성·화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함평 4.8 문장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한 김용현, 김원태, 모동기 등 3명에 대해 항일독립운동을 인정했다.

이들은 1919년 4월 8일 함평군 해보면 소재 문장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본경찰에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불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현은 태극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했고, 김원태는 군중을 모으는 역할, 모동기는 태극기 등을 만들기 위한 자금지원 활동을 했다.

김용현과 김원태는 증거불충분, 모동기는 기소 유예의 사유로 1919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항일독립운동이 확인됨에 따라 국가

에 대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1월부터 1950년 12월까지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 157명이 경찰·공무원·군인·교사 또는 그 가족, 우익활동 인사라는 이유로 지방 죄의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번 진실규명으로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지난해 11월 1일 30건, 올해 9월 26일 175건에 이어, 총 300건으로 늘었다.

나주·장성·화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광주·나주·장성·화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각 지역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됐다. 7월 10일~21일 광주군, 나주, 장성, 화순, 보성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주로 20~30대 남성이었으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광주경찰서, 광산경찰서, 나주경찰서, 장성경찰서,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 제5사단 20연대 헌병대, 전남지구 육군정보국 소속 CIC(방첩대) 등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200호점 돌파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광주시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10년만에 200호점을 돌파했다.

31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이날 남구 사직동에서 희망주택 리모델링 200호점 준공식이 열렸다.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광주시 남구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사업으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희망주택 리모델링 200호점 대상자는 사직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부부 가정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주저앉아 비가 새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0만원과 으뜸호 남구통합돌봄 사업비 200만원 등 총 360만원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뒤 새 지붕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모금된 후원금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영 기자 zzang@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